

人文·社會科學教育의 活性化를 위하여

金 光 億

(서울大 人類學科)

'70년대 經濟成長 위주의 국가정책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게 한 대가로 경제성장 만능주의에 의한 엄청난 政治·社會的 葛藤을 초래하였다. 이제 우리 사회에 팽배한 科學萬能主義는 또다시 發展教育論의 맥락에서 성급하게 대학교육의 政策方向을 결정짓고 있다. 대학교육을 과학계 중심으로 再編하려는 정책입안 과정에서 불균형적 교육이 가져 올 문제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1. 科學重點教育과 人文學

이 글은 科學教育에 혁신적인 投資를 표방한 최근 대학교육 政策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쓰여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미래생활의 質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전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21 세기의 창조라는 거창한 명제에 비하여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서 아직도 낙후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한다면, 과학분야의 敎育과 研究開發에 국가적인 투자를 확대 심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서는 점차 과학기술 자체가 國際關係에 있어서 정치적인 수단 혹은 힘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국가 간의 지배와 종속관계 혹은 적어도 주도적 입장의 국가와 의존적 입장의 국가 사이에는 이

러한 과학기술의 관계가 근거를 이루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6 공화국이 출범하는 벽두에 소위 통치철학의 차원에서 과학에 뿌리를 둔 技術과 기술에 바탕한 革新이라는 구호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政權의 正當性 문제와 결부시킬 정도로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진흥 정책을 반대하거나 조금이라도 그 중요성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것이 인문 및 사회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라서 이제는 진부한 단어가 되어 버린 소위 百年大計의 교육을 위한 올바른 방안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점은 최근 과학기술 핵심주의가 강력히 표면화하고 과학중심 교육의 당

위론이 대두되면서 과학 단능주의마저 나타나기 시작하는 풍조이다. 그것은 언제나 정권의 차원에서 급조되고 급변해 왔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흐름 속에서 지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육 과정에서 과학진흥을 위한 방안이 과연 얼마나 丙實을 기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育成策으로 뒷받침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차제에 대학을 과학계열 위주로 再編하려는 듯한 논의가 암시하는 과학위주의 불균형 교육이 가져 올 문제점들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사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추진하는 정책이 어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는 이미 '70년대에 우리가 몰두했던 經濟成長 만능주의가 경제부문의 성장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하였으나, 그 대가로 엄청난 정치·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초래했으며 오늘날 사회발전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科學唯一主義나 科學萬能主義도 자칫 과학에만 의존하는 사회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효율적 배치와 이에 대한 철학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과학이 그 자체의 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그 발전된 과학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과 각 부문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것은 共同의 善을 확장·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의 독점이나 편파적 소유를 통해 특권층이나 특정한 이익집단이 형성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자면 새로이 개발되는 과학기술의 산물이 경제적인 차이나 사회적인 차별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科學者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나 정치의 문제이며, 따라서 人文·社會科學者의 관심 영역이라고 가볍게 넘겨 버리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제도나 운영체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정하게 분배받아야 된다는 신념에 관한 것이니만큼 哲學과 倫理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자는 자신이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 지식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과 예측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과학자가 과학 자체만을 위하고 그 맥락 속에서 가치를 평가받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에게 害惡을 끼치는 결과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책임 회피를 하게 만들 수 있다. 환경의 오염이나 자원의 고갈 및 변질로 인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변질시키고 인간이 그 삶을 영위할 자연을 파괴시킴으로써 마침내 인간의 파괴를 가져오는 결과가 쉽게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학 발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므로 과학자 개인의 世界觀과 社會觀 그리고 人間觀은 그의 과학적 아이디어 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그는 새로운 과학의 개발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과학자 개인의 資質에 따라서 과학 그 자체의 분야와 수준이 결정될을 감안할 때, 교양과 지식의 종류 및 수준,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함양하는 일은 과학적 지식의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 및 사회과학적 知識·視覺·教育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2. 現 大學教育의 實狀

오늘날 우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한마디로 대학이 저급한 고등학교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지적되듯이 학생들은 모두 높은 성적으로 입학했고 이 나라 장래가 짙어져 있다는 기대와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思考方式은 단순하고·도식적이며 기계적이다. 그들에게서 유려한 文章力이나 복잡한 論述力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환상이며, 소위 풍부한 교양이나 자기 전공분야 바깥의 지식이 부족한 그들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교양영어라든가 교양국어가 아직도 한국의 대학에서 必須科目으로 가르쳐져야 할 만큼 오늘날 한국 대학교육의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연과학 계통의 학생들은 교수와 조교의 지

도 밑에서 세분된 분야의 특수한 실험만 하게 되는데(물론 그것도 시설과 여건이 좋은 학교에 해당되지만),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의 職能人으로서의 과학자를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즉, 개성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 많은 부속 두뇌들의 하나로서 존재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인문계 학생들은 또 어떨까? 그들에게 있어서 대학은 就業 준비의 과정이며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기술과 과편적 지식의 수거장일 따름이다. TOEFL 강좌 안내광고와 취직시험 준비용 시사용어집과 예상문제집이 대학가를 채우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우리의 대학교육이 자유로운 사고와 지적 풍토 위에서 지식을 체계화하고 종합화하는 능력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데 소홀하거나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自律的 存在로서의 인간개발이란 어쩌면 넓은 사상이며 연설문의 장식어에 불과한 것이라 치부할 수 있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전문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어차피 全人教育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라고 자못 實用主義의 탈을 쓰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자는 그것이 경제, 즉 사람들의 物質的 조건이 해결되고 나면 자연히 성취되는 것이라는 견해에서 경제성장론을 교육정책에 반영하였고, 이제는 경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그리고 개인의 생활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과학의 발전을 주장한다.

물론 자연과학 계열의 학생들도 교양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강의를 듣지만, 이는 卒業에 필요한 학점을 따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인문과학은 단순히 개인적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數養을 增大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을 풍부히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스스로 개발하기 위한 정신과 감정 및 감수성 개발의 토양을 마련하게 해준다.

요컨대 오늘날 한국 대학에서는 인문 혹은 인본주의적인 지식과 정신적 토양이 메달라 있기 때문에 언제나 타인이 개발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모방하는 데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도 스스로 개발하는 능력의 함양은 소홀히하고

있다.

3. 未來의 韓國社會와 大學教育의 方向

미사여구로 현란하게 수식된 미래의 우리 사회에 대한 그림은 보다 적실적으로 말하여 국내적으로는 풍요로운 물질생활, 정치적 민주화, 사회정의,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의 실현이다. 세계적으로는 국제화 시대에서 낙후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독자적·자주적 입장을 지닌 통일국가와 개방사회를 지향하는 민족문화의 건설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와 과학발전에 의하여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삶의 質에 대한 재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社會的 存在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개개인이 국가라는 체제의 지시와 요구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존재하는 전문화된 부속품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의로부터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統合의 과정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다. 이 소용돌이는 국가와 국민 간에 이익이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하는 것과 국가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혹은 지배 엘리트와 주변 소외집단 간의 분리, 그리고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호 불신과 증오와 무관심으로 갈등 속에 놓여지게 됨을 인식하게 됨을 뜻한다.

국제적으로는 국제화 혹은 지구촌이라는 말로써 표현되는 넓은 세계관이 요구된다. 이제 어떤 국가나 집단도 고립되고 독자적인 전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모든 사회가 더욱 상호연관적이고 영향을 주면서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화 시대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세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 관심의 다양화와 사고의 자유화를 필요로 한다. 이는 세계관을 넓히고 인간에 대한 깊고 넓은 數養教育의 필요를 인식케 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에 의하여 '80년대 초에는 學部를 교양을 넓히는 교육과정으로 하고 대학원 중심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

과 기술을 개발하는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원의 육성책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은 졸업장 생산공장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교육의 大衆化를 통한 사회발전의 기여라는 구호 아래에서 대학은 졸업장 생산의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은 世界觀을 넓히고 현실에 대한 깊은 洞察力을 기르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각 부문 간에 심화되는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 배경, 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의미를 경험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이질성을 극복하고 共同體的 統合을 상호이해와 존중의 기반 위에서 이룰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현실에 대한 설명보다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념의 연구가 주가 되어 왔다. 그 결과 이념을 위한 이념 혹은 지식을 위한 지식의 창출에 급급해 왔다고 본다. 南·北이 정치적 이념에 의하여 갈라져 있고, 따라서 국민이 이념전쟁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이념논쟁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었지만 이제는 이념의 허구성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사회와 인간의 本質의 문제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經驗的 차원에서의 이해의 폭과 심도를 증대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당장 눈앞의 효용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지식의 중요성이 결정되는 지적 풍토를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질서가 잡힌다면, 그리고 삶의 의미와 질에 대한 윤리적 체계가 확립된다면 사람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자신과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다른 지역 민족집단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축적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 넓은 세계관과 진취적이고 공정한 국제적 감각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선진국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진출하고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수 많은

나라와 사회에 대한 지식의 수요를 의미한다. 이때까지 우리의 교육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수요, 즉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단기적 안목에서의 현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생산에 치중해 왔다. 이웃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회체제 또는 문화체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었을 정도로 우리의 현실적인 생존문제의 해결에 급급해 왔던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었고, 대학교육의 내용과 목표도 이 맥락 속에서 정립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안목과 지식이 없이 자기 국가나 자기 민족집단의 태두리 안에서 안주하는 자세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세계란 반드시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소위 몇몇 선진국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것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에 의해서는 우리가 아무 것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없다. 과학기술의 예를 보더라도 그것이 내수산업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상품화되어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自力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판매하고 소비시킬 시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 과학기술이라는 상품의 소비시장과 수요창출을 위해서도 우리는 외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폐쇄적인 國粹主義를 극복하고 세계에 대한 공정하고 넓은 理解力을 기르는 교육의 개발이 시급하다.

4. 人文·社會科學 教育을 위한 提言

결국 대학에서는 질적으로 수준높은 교양교육의 다양화를 시도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담당하는 人的 資源의 개발이 해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분야의 교과목을 늘리고 이에 대한 수준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質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임교수에 비하여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다. 많은 대학들이 재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임교수를 확보하지 않고

시간강사로 강의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영국 옥스포드대학이 9.8명, 일본 동경대학이 9.0명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은 35.4명이며 가장 양호한 서울대의 경우 20명 정도라고 한다. 보수의 많고 적음이나 학문연구의 시설·조건에서의 보조 여부를 떠나서도 이러한 열악한 학생지도의 조건 속에서는 충실한 학문연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나마 이 35.4명이라는 것은 평균치이며 이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의 대학이 얼마든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흔히 국민학교를 말할 때 ‘콩나물교실’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학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특정 분야나 특정 학과의 정원만을 늘린다고 해서, 그리하여 그 분야의 졸업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그 분야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교육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신청하여 듣는 강의를 名講義라고 소개한다. 실제로 그러한 것을 자신의 인기의 척도로 삼는 연예인 속성을 지닌 교수도 있으며, 그러한 교수일수록 언론매체에서는 능력있는 교수인 양 소개된다. 그러나 진정한 교수라면 이러한 사태에 진저리를 친다. 소위 대형강의란 교수의 학문적 수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교과목의 적절한 분리, 그 과목을 가르칠 교수의 수, 그리고 학생을 분산수용할 강의실 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임을 언론은 호도해서는 안 된다. 강의를 일종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기념강연이나 기획강좌인 경우에는 수천 명의 청중이 동원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강의가 학점과 시험과 지도로 구성되는 敎育의 한 수단이라면 그 충실을 위해서 한 교수가 몇 명의 학생에게 충분한 지도와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指標가 있을 것이며 이를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교육행정가나 정책입안자들은 일반적으로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연구는 원고지와 연필과

몇 권의 참고서적만 있으면 되고, 강의는 칠판과 분필만 있으면 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研究란 시간과 그것에 바칠 정력과 그리고 여건이란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도 외국에 대한 의존과 종속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교과내용에 있어서 교재 부실, 최근 연구동향의 適時의 접촉 부족, 연구부족 등은 언제나 회자되는 것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에서 가르쳐지는 지식이 자생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이 輸入仲介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해외에서 개발된 이론과 모델의 주입에 치중하다 보니 그것의 한국적 상황·조건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쯤이나 외국 학자의 연구결과를 빌려 와서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데 이용하거나 외국 학자에 의하여 개발 소개되는 새 이론과 연구대상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독자적으로 이론을 개발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研究人力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능력과 정열과 아이디어를 살릴 與件이 주어지지 않아서 초래된 결과이다.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와 강의의 질적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대학 강의란 남의 연구를 수입하여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創造的 知識의 토론장이며 스스로 개발하는 능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學問的 研究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하고 연구결과가 종합화되고 입체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수를 늘리는 것에 앞서서 교수의 수를 증원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 수의 증원에 의한 재원확보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수와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外部의 投資가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에서는 첨단 최신행 그리고 응용성 있는 분야에 대한 선호를 벗어나서 基礎科學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 첨단이란 기술로 나타내지만 그것은 기초과학의 충실도에 의해서 自生力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대학과 대학원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지식을 탐구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흔히 외국의 저명대학에 한국인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놓고 한국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자랑스러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젊은이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외국으로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自省을 갖게 한다.

이와 아울러 모든 교육정책과 지원이 과학 일반도로 나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절대적인 不均衡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의 質뿐만 아니라 科學의 土着的 發展을 위한 토양의 확립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학문의 각 분야는 그 독특한 영역이 있어서 그것에 우·열을 매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수요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학문분과의 지원에 緩急이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에 따라 특정분과 학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함으로써 等級을 매겨 왔다. 선진국 혹은 선진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학문과 지식에 대한 편파적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편파적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발달된 것의 수입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은 학문과 지식의 對外從屬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研究時間의 確保가 중요하다. 전임교수의 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여건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사회과학은 현실 속에서 經驗的 調査와 研究가 축적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지식의 傳遞과 論議가 생명인 것이다. 강의 일반도의 교수방법으로는 학문적인 활발성과 성실성이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 충분히 실천되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교류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교재개발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세미나를 유도해도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 도서관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와 제공이라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현실적 이용성이 적은 古蹟 보관소로서, 그리고 시험준비 학생을 위한 열람장소 혹은 自置 공간으로서 전락해 있는 실정에서는 교수가 자신의 박봉으로 개인적인 도서관을 하고 다시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읽혀야 한다. 게다가 지식의 가속적인 발전은 새로운 지식조착 금방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未來社會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은 세계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와 현실에 대한 구체적 지식의 추구, 그리고 學問的 自生力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충분한 人的 資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 글을 맺으면서 결국 또다시 교육은 國家百年大計라는 진부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